

## [보도자료]

 <small>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small> <b>국가안보전략연구원</b>			
배포일	2026. 3.30(월)	문의	기획실(02-6191-1154)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6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 미중일러 4개국 전문가, '안정적 공존' 단계적 접근 필요성 한목소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3월 30일(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6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미대화 견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중일러 4개국의 저명한 전문가 8명이 참여하여,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외교적 접근 방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관국 역할을 심층 논의하였다.

개회식에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연기되어 아쉽지만, 머지않아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군비통제적 접근 방안도 의제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하고,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자세로 한미 공조 하에 북미대화 재개 여건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1세션: 북미대화 견인을 위한 외교적 접근 방향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미중일러 4개국 전문가들이 현재의 북미 대화 교착 상태와 돌파구를 집중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공통적으로 주목하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각국의 시각을 교차하며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미국의 프랭크 엄(Frank Aum) 스티븐 센터 비상임연구원은 비핵화라는 전통적 대화 기반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전제로, 워싱턴이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비핵화를 즉각적·명시적 정책 목표에서 후순위로 두고, ICBM·전술 핵 체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약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후순위화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중국의 리난(Nan Li)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9차 당대회가 북한의 '전면적 발전 단계' 진입을 선언하고 경제적 실용주의를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 지위를 인정한다면 김정은이 대화에 더 수용적일 수 있지만, 이란 전쟁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는 김정은의 측근들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일본의 호소야 유이치(Yuichi Hosoya)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미국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이 '제1도련선' 방어에 초점을 두면서 한반도가 그 경계 밖에 위치한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서울이 도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외교 경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러시아의 이반 티모페예프(Ivan Timofeev) RIAC 사무총장(화상 참여)은 이란 전쟁이 중국, 북한, 러시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는 안보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도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란의 사례에서 '핵 보유야말로 최선의 체제 보장 수단'이라는 교훈을 더욱 굳힐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 2세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관국 역할

이상현 前 세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은 2세션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전제로 미중 일러가 수행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미국의 안킷 판다(Ankit Panda)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인 협상 프레임워크로서 '안정적 공존' 개념을 거듭 강조하면서, 초기 의제를 ICBM과 전술 핵 체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약으로 좁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 미사일 방어 자산의 소모가 동북아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였다.

중국의 류아밍(A-ming Liu) 상해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이 '쌍중단(雙暫停)·쌍궤병행(雙軌並行)'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미 양측의 신뢰를 보증하는 '행동 대 행동'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중 관계가 형성될수록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히라이 히사시(Hisashi Hirai)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근본 원인이 일본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이재명-다카이치 관계를 활용해 트럼프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권고하였다. 또한 그는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의'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평양 주재 한국 대사관 설치가 평화 공존의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구빈(Andrey Gubin) 극동연방대 교수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심화된 양국 관계를 배경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 ■ 주요 공통 논의 결과

4개국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 인식이 도출되었다.

- ▶ 비핵화를 즉각적 목표로 한 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정적 공존'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 ▶ 이재명 정부의 '동결-감축-비핵화' 3단계 해법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 미국-이란 전쟁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자원 분산이 한반도 외교 환경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 논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선제적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 ▶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보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의'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이끄는 데 현실적인 접근이다.

연구원은 "오늘 회의에서 미중일러 4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국의 전략적 인식과 역할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국제학술회의를 정례화하여 한반도 평화 관련 전략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끝.